

한강유역네트워크

— 창립식 및 초청강연—

| | 2015년 9월 9일(수) 11:00~12:3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 211호

한강유역네트워크

차 례

1부 | 창립식 11:00~12:00

사회/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여는말씀 김정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돈옴말씀
- 경과보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발표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생명의 강, 헌시 양호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 상류 | 중류 | 하류
- 창립선언문 낭독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특별결의문 채택 공동대표단
- 창립 세레모니

2부 | 초청강연 12:00~12:20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

- 발표 : 김정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토론 : 참석자 모두

목차

1부 | 창립식

- 헌 시 | 5 |
- 여는말씀 | 6 |
- 경과보고 | 8 |
- 조직구성 | 11 |
- 활동계획 | 15 |
- 창립선언문 | 20 |
- 특별결의문 | 21 |
- 정 관 | 22 |
- 초청강연 | 27 |
- 보도자료 | 37 |
- 언론보도 | 40 |

2부 | 초청강연

- 주제 :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 | 27 |
김정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1부 | 창립식

- 여는말씀
- 도움말씀
- 경과보고
-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발표
- 생명의 강, 헌시
-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
- 창립선언문 낭독
- 특별결의문 채택
- 창립 세레모니

현 시

생 명

양 호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강물은
시간의 껍질을 깨고
쪽빛 꽃잎 숨결 되어
시나브로 나에게 다가온다

강물은
한바탕 소낙비 끝 무지개처럼
각기 다른 모양새와 속도로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게 한다

강물은
종이에 물이 스미듯
은빛물결을 타고
목마름에 지친 대지를 청명하게 한다

강물은
온기 머금은 숨결따라 점점 부풀어 올라
또 다른 새로움의 공간을 향해
꿈과 희망을 안고 넘실 넘실 춤추며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강에서 만난 사람들은
더 따뜻하다.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에 부쳐

조선왕조는 건국과 더불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천벌을 받을 범죄로 보고 엄격한 법을 만들어 이를 보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은 외국 사신들을 안내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한강을 둘러본 유럽인들도 그 아름다운 풍광에 감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본 그 맑고 아름다운 절경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강이 남아 있었다면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소양댐과 팔당댐을 비롯하여 수많은 댐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그 맑던 물이 더러워졌고 유역의 주민들은 오염의 주범으로 몰려 고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종합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강폭을 형편없이 줄이고는 콘크리트 제방 쌓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한강을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인공수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적도 사라졌고 풍광도 크게 훼손되었으며 물은 오염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변진 독성을 띤 녹조가 이제는 한강에도 창궐하여 유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은 본래 하늘이 모든 사람과 만물의 생명을 풍성하게 살리려고 내린 은혜인데 이제는 물고기들이 죽고 사람들이 마시면 독이 되는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한강을 살리려고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물은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역의 모든 사람들이 강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강을 지키고 살리는 데 있어서 의무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강은 유역별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상·중·하류 유역의 주민들이 그 간 수없이 많이 만나고 토론을 하고 산고를 겪으면서 이제 탄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생명의 젖줄인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되살리는데 뜻을 모으고 힘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른 유역과도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모든 강에 생명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9월 9일

김 정 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경과보고

- 13/11/05 : 양평지역간담회
 - 상, 중, 하류의 한강유역 단체들의 첫 만남
- 13/11/12 : 고양지역간담회
 - 한강하류의 중요성 인식제고
- 13/11/19 : 서울지역간담회
 - 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의 필요성 공감
- 13/12/10 : 강원지역간담회
 - 한강본류운동에 있어서 상류지역의 의미 재조명
- 13/12/19 : 국회토론회
 - 주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한강수계위원회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 14/01 : 지방선거대비 한강수계관리제안을 위한 델파이조사 진행
- 14/04 : 민선6기 지방선거를 위한 한강수계관리 정책개발보고서 작성
 - 의제1. 한강 및 수자원관리를 명실상부한 유역관리체계로 변경, 유역관리를 위한 굿거버넌스체계구축
 - 의제2.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민주화하고 조직형태와 구성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 의제3. 국비와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원칙을 정립하여 역할과 경계명확
 - 의제4.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 재설정
 - 의제5. 유역 내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전문역량강화
 - 의제6. 한강의 수질 및 환경개선

- 14/04/06 : 한강유역환경청장 간담회

- 14/05 : 각 지방선거 후보에게 ‘깨끗한 한강과 건전한 유역거버넌스를 제안합니다’에 대한 반영요청(2014년 지방선거후보자 정책제안서
 - 정책제안
 1. 한강유역 및 수자원관리의 유역관리체계전환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혁
 3. 수계관리기금 사용원칙 재정립 및 수계법 상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 재설정

- 14/07/10 : 한강유역 건강한 거버넌스의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및 집담회 개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구성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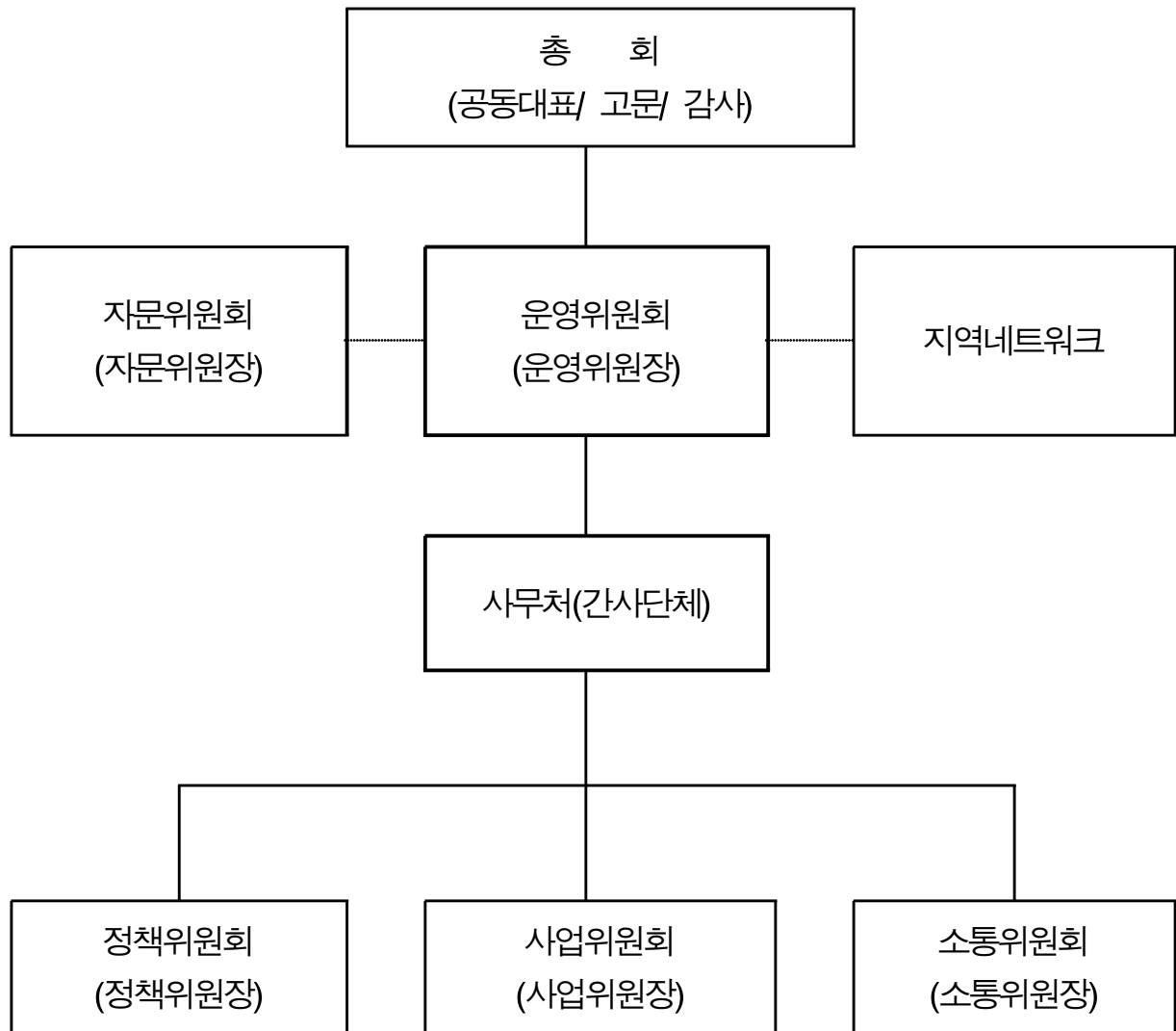
- 15/01/13 : 한강유역네트워크 하류지역 간담회

- 15/06/24 : 한강유역네트워크 운동과 위상 집담회
 -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을 목표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전개
 - 소위구성해 발족준비를 하기로 함 “김경준 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박평수 고양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이광우 한강사랑대표,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이현수 한강생명포럼대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15/07/06 : 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실무위원회(1차)
 - 실무위원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간사단체: 서울환경연합
 - 8월말 경 창립키로 하고 5차례 실무준비위원회를 진행키로 함
- 15/07/20 : 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실무위원회(2차)
- 15/08/07 : 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실무위원회(3차)
- 15/08/11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반대입장 발표(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반려)
 -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충청투데이, 충청매일, 중도일보, 동양일보, 노컷뉴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보도

- 15/08/17 : 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실무위원회(4차)
- 15/09/03 : 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실무위원회(5차)
 - 한강 상, 중, 하류 회원단체 및 조직구성, 정관작성 등 발족을 위한 실무회의
- 15/09/09 :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총회 및 초청강연, 발족식 개최)

조직구성(안)



(1) 총회

- ▷ 한강유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하고 최고의결단위이다.

(2) 공동대표

- ▷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대표하는 5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두며 1인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공동대표는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대표하며 단체운영과 활동을 총괄한다.

(3) 자문위원회

- ▷ 한강유역네트워크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요 인사들로 구성하며, 한강유역네트워크 활동전반을 자문·지원한다.

(4) 운영위원회

- ▷ 한강유역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상시 의결기구의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운영과 사무처(간사단체)를 총괄한다.

(5) 사무처(간사단체)

- ▷ 회의 소집, 정보 제공, 사업기획 및 진행 등 사업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사무처는 간사단체의 역할을 한다.

(6) 정책위원회/ 사업위원회/ 소통위원회

- ▷ 한강유역네트워크 내 3개 소위원회를 두고 참가단체별 책임과 역할을 높인다.

임원구성(안)

- 공동대표(5인)

김정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상임대표)
안봉진 북한강생명포럼 이사
양 호 분단환경시민의모임 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연합 공동의장
외 1인(여성대표)

- 고 문(5인)

곽결호(前 환경부장관), 민병채(양평 前군수), 이은형 신부(의정부교구 민
족화해위원장), 이치범(前 환경부장관), 정성현(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
사장)

- 감 사(2인)

박진수(재정/ 회계법인 평진 대표), 박태현(사업/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자문위원(25인)

김성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양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장하’
박용신 (사)환경정의 운영위원장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종관 건국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창재 댐반대국민행동 사무처장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성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이한구 인천의제21 (전)사무처장
이항진 여주환경연합 집행위원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인환 협성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조용모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주현준 이디컴 대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최준기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명예교수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 운영위원(14인)

김경준 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김은령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대표
김인구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 사무국장
박삼호 왕숙천사람들 대표
박평수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배세령 고양환경연합 사무국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이광우 한강사랑대표
이국상 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이혜경 인천환경연합 사무처장
정명희 파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정병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 운영위원장(1인)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정책위원장(2인)

김경준 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소통위원장(2인)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박평수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사업위원장(3인)

이국상 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정병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활동계획(안)

▶ I. 창립배경

1. 4대강 특별법 제정 10년, 유역시대의 개막

- 상 지역주민들의 상생을 위한 4대강 특별법 제정 10년, 4대강 수질과 생태계 관리의 자율적 기반조성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 강과 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 강과 하천에서 깃든 역사와 문화,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 시대 개막
- 상하류 교류, 민관교류, 도농교류 등 지역간, 분야간, 계층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활동시대

2.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강유역 공동체의 기반조성

- 오염하천 감시 및 복원활동, 정책감시 활동을 진행하던 1990년대 말, 한강유역의 민간단체들간의 교류활동 시작
- 정부의 4대강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상하류 교류 및 지역간 교류 활성화. 한강유역 단체들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주민참여형 유역운동 전개. 거대담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유역운동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도출
-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한강유역 민-관 협의기구의 기초

3. 비판을 넘어, 진정한 협치를 위한 통합적 유역운동의 필요성

- NGO들의 정책대응력 강화와 협치중심의 예방적 연대운동의 필요성
- 이명박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단절된 민-관 파트너십 회복과 협치를 통한 한강보전의 비전제시
-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유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한강유역보전 실천협의회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 II. 목 표

1. 한강유역 민간단체의 전문성배가 및 정책대응력 강화
2. 한강유역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및 주민참여형 유역운동 활성화지원
3. 주민참여형 유역운동의 실천과제발굴 및 성공을 위한 한강유역단체 교류협력
4. 한강수계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개선방안, 바람직한 한강유역운동의 방향을 위한 정책교류
5.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단절된 민관파트너십 회복과 합리적 유역거버넌스운동의 공동모색

▶ III. 주요 활동

1. 한강유역 민간단체의 전문성강화 및 정책대응력 강화

-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한강유역의 수환경과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유역별 강포럼 및 강포럼을 통한 지역의제 발굴

2. 한강특별법의 진단과 개선을 위한 협력

- 한강특별법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민간 공유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오염총량제, 주민지원, 토지매수, 환경기초시설 등) 운영의 성과에 대한 확산과 문제점에 대한 정책공유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공유

3. 한강보전을 위한 권역별 정책아이템 및 활동 교류

- 권역별 강 보전을 위한 정책 교류
- 한강 공동의 실천활동 목표 수립, 공동의 실천전략 수립
- 소유역 운동, 대유역 운동의 성공모델 정립

- 유역운동의 성공방안 교류
- 한강유역 보전을 위한 연구와 홍보

4. 주민참여형 실천활동의 지원 및 교류

- 권역별 주민참여형 운동의 성과와 문제점 공유
- 권역별 주민참여형 운동의 실천
- 한강 민간교류를 넘어선 주민교류 사업 진행
- 상류와 하류,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천활동

5. 각 유역별 네트워크 활동지원과 협력

- 각 권역별 네트워크 활동의 협력과 지원

6. 진정한 협치를 위한 한강유역 민관 파트너십 회복과 협력

- 정부 및 지자체와 정책교류 활성화 및 파트너십 회복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의 비전 수립과 협력활동
- 한강유역포럼, 각 권역별 포럼, 민-관협의체 성격의 한강유역센터 구성

▶ IV. 예산

▷ 원 칙

- (1)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자립적 운영을 위해 분담금(회비)을 둠
- (2) 공익적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적기금을 활용
- (3) 시민, 기업후원금

<수입부> 15,500,000원

회 비 : 총 13,500,000원

공동대표 : 150만원 (30만원*5인/년)

운영위원 : 300만원 (20만원*15인/년)

참가단체 분담금 : 500만원 (10만원*50개단체/년)

개인회원 : 200만원 (2만원*100인)

후 원 금 : 개인 및 단체, 기업 400만원

사업지원금 : 공익사업지원금

<지출부> 15,500,000원

사 업 비 : 총 850만원

기관 간담회 250만원 (50만원*5개지역)

정책포럼 500만원

창립대회 100만원

운 영 비 : 총 700만원

출장비 100만원 (10만원*10회)

사무운영비 100만원 (10만원*10개월)

회의비 500만원 (10만원*10인*5회)

참가단체(안)

● 상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동강보존본부, 원주YMCA, 원주환경연합,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태백생명의숲, 한강생명포럼, 황성환경연합

● 중류

경안천시민연대, 덕풍천/산곡천 사람들,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 복하천/양화천사람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수리산자연학교, 왕숙천사람들, 여주환경운동연합(여강길), 용인환경정의, 청미천사람들, 팔당포럼, 팔당시민연대, 팔당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팔당특별수질정책협의회, 한강사랑,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흙천사람들

● 하류

가톨릭환경연대, 강남서초환경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고양환경연합, 녹색강동연대,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불광천을 사랑하는 주부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동부여성환경연대(초록상상), 서울환경연합, 송파그린시니어, 숲여울기후변화넷, 시민환경연구소, 위례시민연대, 인천환경연합, 파주환경연합, 한강하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실천연합

창립선언문(안)

오늘 우리는 한강 상중하류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한강유역공동체인 한강유역네트워크를 창립한다. 오랜 시간 논의해온 소통의 결과이다. 이제 우리는 지역간, 계층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강을 주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지금 한강은 신음하고 있다. 댐과 보로 가로막혀 물길이 단절되고 팔당 상하류 어디에서나 연일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수질이 오염돼 먹는 물이 위협받고 생태계는 단절돼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다. 큰빛이끼벌레와 끈벌레가 확산되며 생태계 이상징후가 잇따르고 서해에서 올라온 토종돌고래 상괘이는 신곡보 상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고 있다. 물고기가 계속해서 떼죽음을 당하고 한강유역 지역주민들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행정당국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자연과 공존하며 강수욕을 즐겼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넓은 모래사장과 여울이 가득했던 생명의 강 한강을 그리워하며, 꿈을 희망으로 그리고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겠다며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수질은 달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강유역에서는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두고 사회적인 갈등과 상호불만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무엇보다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며 신음하는 한강을 치유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강본류와 지류하천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하는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과 하천에 깃든 역사와 문화,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 사회적인 연대를 확산하고 자연과 사람, 상중하류, 도농, 각계 계층이 공존하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금의 한강은 단절과 상처로 얼룩져 있다. 막힌 곳은 허물고 교류는 활발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사회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한강의 물길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한강유역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주민참여형 유역운동의 실천과제를 발굴해 지원하는 하천의 주민자치를 실현해 낼 것이다.

한강은 흘러야 한다. 그리고 유역공동체는 회복되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일부가 되어서 한강의 물길과 유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힘차게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9일

한강유역네트워크

특별결의문(안)

국토부는 신곡보를 철거하라

한강오염이 심각하다. 최근 한강에 큰빛이끼벌레와 끈벌레가 출현하고, 녹조가 창궐하는 등 한강생태계의 이상징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 여름 최악의 녹조사태에 대해 국토부는 가뭄 탓만 하고, 태풍과 비를 기다리며 고비만 넘기려 했다. 그러나 한번 자리잡은 녹조는 재발할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녹색으로 물든 강물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의 상·중·하류 민간단체들이 한강유역의 생명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오늘 창립한다. 연대와 소통을 통한 상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한강 하류의 물길을 가로 막은 신곡보 철거를 촉구한다.

잠실보에서 신곡보까지 콘크리트로 덮인 지금 한강의 모습은 30년도 안 된 낯선 풍경이다. 특히 신곡보는 물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녹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에서도 신곡보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7월 23일 서울시는 고양시·김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녹조해소를 위해 신곡수의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신곡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한강녹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국토부가 지난 30여 년간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보를 조속히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신곡보 철거를 위해 상·중·하류 민간단체, 지역주민들과 연대하고 한강의 모래톱과 여울, 수변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9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정 관(안)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우리단체의 명칭은 ‘한강유역네트워크’라 하며 영문표기는 ‘Han Gang Network’로 한다.

제 2조(목적)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의 생명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연대와 소통을 통한 상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

제 3조(위상)

시민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한강유역 민간단체의 연대기구이다.

제 4조(범위)

한강유역과 한강 물을 용수로 활용하는 지역을 범위로 한다.

제 5조(소재)

사무실은 사무처가 있는 소재지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역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6조(사업)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물, 유역, 환경문제 등 유역관리 및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활동
2. 한강유역 수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
3. 유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
4. 한강유역 조직운영 및 유역운동역량 강화
5. 기타 한강유역의 환경보전 및 유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활동

제 2장 회원

제 7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우리 단체의 목적과 회칙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하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한강유역에 있는 단체 또는 한강 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지역의 단체나 개인
2. 환경단체 또는 물(유역) 운동을 주요활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단체 및 기구
3. 한강유역 각 지역네트워크에 가입한 단체나 개인으로서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입한다.

제 8조(회원의 상실)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개인 및 단체의 사정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거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
2. 제명되었을 때

제 9조(회원의 권리)

회원단체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운영 및 활동계획에 관한 의사결정 권리
2. 단체의 활동과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0조(회원의 의무)

회원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2.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
3.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의무

제 3장 조직체계

제 11조(총회)

1. 총회는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한강네트워크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2. 총회는 총 회원단체 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정기회의는 매년초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대표, 회원 1/10, 감사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선출, 고문 위촉
 - ③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④ 부설기구의 설치 승인
 - ⑤ 단체해산 의결
 - ⑥ 기타 조직의 진로와 활동에 대한 주요사항

제 12조(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대외적으로 우리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운영과 활동을 총괄한다.
2. 공동대표는 5인이내로 구성하며, 1인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3. 공동대표는 한강권역별 네트워크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조(고문)

1. 고문은 전임대표 또는 우리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총회에서 위촉한다.
2. 고문은 우리단체의 운영 및 활동 등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 14조(감사)

1. 감사는 2인 이하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5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우리단체의 일상적 의결기구이다.

2. 우리단체의 일상적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장을 둔다.
3. 운영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운영위원 1/3 이상 발의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권역별 2~3인 총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5.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① 총회 위임사항의 의결
 - ② 회칙개정안, 임원인선안, 예산안, 사업계획안 등 총회 안건상정안 작성
 - ③ 운영위원장의 선출
 - ④ 일상적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
6.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자문위원회)

1. 정책자문위원회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 유역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위원은 공동대표단에서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17조(지도위원회)

1. 지도위원회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 유역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2. 위원은 공동대표단에서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18조(부설기구)

1.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있어 특화된 영역을 전담할 수 있도록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2. 부설기구 설치에 운영위원회가 승인하며, 부설기구의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 19조(사무처)

1. 사무처는 간사단체역할을 하며 상설실무기구이다.
2. 운영위원장은 사무처를 총괄하고 실무업무를 분장한다.

제 4장 조직운영

제 20조(임기)

공동대표, 감사, 지도위원,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1조(재정 및 회기년도)

1. 수입은 회원의 회비, 단체 분담금, 사업수익금, 후원금, 공익사업지원금,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2. 회기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조(포상 및 징계)

1. 단체 또는 유역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2. 단체 또는 유역운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개인과 단체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기타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3조(해산 및 귀속)

1. 단체는 총회원 2/3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2. 단체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 1조(시행)

1. 이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즉시 시행한다.
2. 창립 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7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2조(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회칙제정 : 2015.9.9

2부 | 초청강연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

김 정 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1. 들어가며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느 강에서나 먹을 감을 수가 있었고 깨끗하고 맛 좋은 물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마실 수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많은 개울이 물이 마르고 강들은 훼손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지 못해서 많은 비용을 들일 정도로 전국의 물이 급격히 오염되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마시는 물만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맑은 물 대책에 총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금 안심하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이 국민의 1%도 안 될 정도가 되었다. 홍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1970년대 이래로 1000여개의 대형 댐을 지어 세계 제7위, 밀도로 따지면 세계 제1위의 대형 댐 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오히려 홍수 피해액은 매년 백억 원 단위에서 지금은 조원 단위로 100배가량 경충 뛰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벌였으나 오히려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사상 최악의 가뭄이 연달아 들고 농지들은 물에 잠기고 물고기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독성을 띤 녹조가 창궐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과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 물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이 가진 하천 생태계를 존중하지 않고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였다. 4대강 사업이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하여 강들을 인공적인 수로로 만들면서 생물들이 서식처를 잃었고 물고기들이 산란한 장소도 없어졌다. 그리고 강에 댐과 보가 세워져 흐름이 연속성을 잃

으면서 물이 정체되어 오염이 강바닥에 축적되고 녹조가 발생하게 되었다. 강의 횡적인 연속성도 차단되어 강변에는 제방과 도로가 건설되어 유역에 떨어진 빗물이 수변습지를 거치면서 정화되어 강에 흘러들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막혔다. 그리고 물의 순환체계가 교란되어 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길이 끊어져 하수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수도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강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서서히 유출되어야 홍수도 줄이고 물도 깨끗해지는데, 지금은 빗물이 땅바닥을 씻고는 곧바로 하수관 혹은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곳곳에서 침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비가 온 초기에 도시의 땅바닥을 씻어 내리는 물은 오염이 극히 심하여 이것이 때때로 비온 후에 물고기들을 몰살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유역의 물수지 균형을 무시한 물 정책으로 인하여 한 유역의 물을 유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다른 유역으로 보낸다든지 하여 지역 간에 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물을 많이 쓰는데 치중했고 물을 절약하는 정책이 부족했다. 변소와 부엌을 비롯하여 우리의 주택구조는 물을 미국 사람만큼 많이 쓰도록 만들어 졌고, 아파트 단지나 도시나 산업공단 등에서도 물 재활용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수관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었다. 우리나라 상수관의 누수율은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30% 정도라고 하나 실제로 5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수도물 값을 받는 것은 공급한 물량의 절반도 안 된다. 특히 산업용 물 값이 너무 쌌기 때문에 산업용수의 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앞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산업개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생태학적으로 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개념이 없었기 수계에 물이 모자랄 정도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골프장을 짓고, 강 상류에 오염이 심한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특히 댐피아들의 세력이 막강하여 댐을 짓기 위하여 물 수요를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예측해 놓는다. 우리나라 물 계획 인구는 실제 인구의 두 배인 1억 명에 이른다. 그리고 최근에는 물 사용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댐을 더 짓고 있고 또 더 지을 계획을 하고 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 물 관리의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음용수 수질기준을 보면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거의 모든 항목에서 느슨한 기준치를 채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음용수의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오염물질은 없고 한 가지의 독성물질만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에서는 수많은 오염물질들

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복합적인 오염을 생각할 때에 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느슨한 기준을 수질관리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도 문제이다.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언제 어디서라도 달성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곧장 팔당댐의 연평균 수질을 가지고 몇 급수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일 년 동안의 물을 평균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매순간 물이 오는 대로 마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팔당댐의 물은 언제 마시더라도 안전하도록 관리가 되어야만 한다. 일본은 수질환경기준의 수치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할지 몰라도 적용 방법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연평균 수질을 가지고 기준과 비교하는데 비하여 일본은 매일 매일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호수의 용존산소농도(DO)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썩어서 산소가 없고 문제가 되는 호수 바닥의 DO를 평가하지 않고 표면에 가까운 물의 DO를 가지고 기준과 비교하고 있다. 부영양화된 호수의 표층수는 낮에는 거의 과포화가 될 정도로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DO가 기준에 미달하는 호수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된다. 녹조를 측정하는 방법도, 녹조는 물의 표면에 떠서 발생하는데 측정은 그보다 깊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넷째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사업이 외형적인 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했지 그 실제 내용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율이 80%를 훨씬 넘어섰다고 발표한다. 이러한 하수처리율은 일본의 70%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가장 오염이 심한 공단의 지천이라 할지라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거의 모든 일본인들이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는 많은 지천들이 하수도처럼 되어 있고 거의 아무도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하수처리장만 지었지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지은 공단이나 도시에서 분류식으로 하수관과 우수관을 따로 묻었는데, 알고 보면 거의 모든 관들이 다 오점이 되어 우수관으로 하수가 흘러가고 하수관으로 우수가 흘러드는 형편이다. 그리고 오래된 하수관들은 또 터져서 새고 있다. 상수관의 누수율이 거의 50%를 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하수관이 오점되거나 누수되어 새어나가는 비율이 이보다 훨씬 더 크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물은 농도는 묽고 양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수질을 개선해야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악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사업이건 하천의 수질이 미미할 정도로 조금밖에 더 안 더러워진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리고 법에 정해진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서류만 제시하면 사업이 승인되었다.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가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질을 조금 밖에 더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모이고 모여서 해가 갈수록 상수원의 수질이 자꾸 더 악화되어 왔을 뿐이다. 그 동안 수십조 원을 쓰고도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말은, 정책을 잘만 썼으면 돈을 안 쓰고도 수질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방치했다는 뜻과 같다. 그것은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실제로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하천변에 위락시설 앉히고 골프장 건설하고 도시나 공단을 개발해서 오염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수관리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댐 짓는 데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홍수피해를 일으키는 산지개발이나 하천 변형이나 홍수범람지역에다가 도시를 개발하는 등의 무모한 정책은 펴지 말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런 무모한 사업들을 벌여놓고 후에 홍수피해가 나면 다시 댐을 더 지어야한다는 논리를 계속 제시하여 왔었다.

3.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과제

유역관리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우선순위는 유역의 생태적 관리에 두어야 한다. 유역의 관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물 관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하천들이 종적으로 또 횡적으로 연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물순환체계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홍수관리 차원에서 댐, 저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하천 등 모든 시설과 토지 이용을 연계하여 유역단위로 관리해야 하고 특히 물길을 함부로 막거나 바꾼다든지 홍수 범람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비점오염이란 하수관으로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지 못하고 땅바닥을 씻고 가는 바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을 말하는데, 이 오염이 강이나 호수

에 유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걸러줄 수 있는 곳이 수변(水邊)지역이다. 수변지역을 십 미터 정도만 잘 식재를 하고 관리해도 수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수변지역에 토목공사를 벌여 식생을 없애고 인공구조물들을 설치하는 등 물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어 왔었다. 그 동안 수변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다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친수구역특별법’을 만들어 이 제도를 완전히 무효화해 버렸고, 박근혜 정부는 소위 ‘5대강 사업’이라고 하여 하천변에 친수지구를 개발한다면서 거창한 토목공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조감도를 보면 눈을 현란하게 하지만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을 부추기며 물난리 위험을 키운다. 수변구역은 놓고 있거나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간이다.

유역 중에서도 하천 상류의 소유역과 농촌 유역의 환경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유역이 수계 하천의 배경 수질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소유역 단위의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서는 보다 큰 유역의 하천관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들 상류의 소유역을 흐르는 마을의 도랑들은 많은 곳이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곳으로 전락해 있고 그 상류에서는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도랑들을 살려야 한다. 이들 하천 상류 마을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하수를 생태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으로 올바른 토지이용을 추구해야 한다. 생태학적으로 무리한 축산과 화학농법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다. 유럽의 나라들은 유역의 영양물질 수지를 평가하여 농업과 축산활동까지도 생태학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농경지의 유출수도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우수지 같은 데 모아서 에너지나 인력이 과히 들지 않게 자연적인 공법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변지역을 확보해 두어야만 가능하다. 빗물도 하수관으로 빨리 배수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땅에 많이 스며들게 하고 천천히 배수되도록 해야 수질관리가 된다. 하천 상류의 도랑들을 살리지 못하고서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물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와 도시에서의 물 사용량과 오염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 도시구조, 주거단지구조, 국민생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폐수 무방류를 목표로 삼고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도시나 주거단지도 물이 최대한 재활용되고 또

빗물까지도 빨리 배수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홍수와 가뭄대책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를 해결한다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갔지만,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 4대강에 많은 물을 모아뒀지만, 이 물을 펌프로 수백 미터 끌어올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나 경기도의 산골에 보낼 수 없고, 해안지역이나 섬에 보낼 수도 없다. 높은 산골에 모아둔 소양댐의 물도 이들 지역에 수돗물로 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더구나 낙동강 하류에 담아둔 물을 이들 지역에 농업용수로 보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끝났지만 최악의 가뭄은 계속됐다. 홍수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홍수 위험을 키웠다. 홍수 피해 지역의 상류에다 댐을 지어 홍수를 막는 것은 흔히 하는 방법이지만 4대강 사업에서처럼 홍수 지역의 하류에다 댐을 만들어 수위를 올려놓고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상식을 거스른다. 강의 수위를 올리면서 이미 물에 잠긴 농지도 있고, 지천의 수위도 오르면서 독이 터져 침수를 당한 곳도 많다. 낙동강에는 총 10개가 넘는 댐이 줄줄이 세워졌는데 홍수가 날 때에는 각각의 댐이 자기 마음대로 수문을 여닫아서는 안 된다. 연계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만약 한 댐이라도 잘못해서 무너지는 날이면 그 아래의 모든 댐들이 줄줄이 무너져 대형 재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가뭄과 홍수 대책은 실제로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물이 부족한 마을마다 저수지를 잘 정비하고, 산림이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녹색댐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빗물을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실제로 도움이 된다. 집집마다 빗물을 받아두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또 마을마다 마을 단위로 빗물을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뭄을 해결하고 또 홍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독일은 물부족국가라는 말을 안 하고도 집집마다 빗물을 받아쓴다. 산지에 지어진 골프장은 가뭄과 홍수를 부추긴다. 논은 비가 올 때에 물을 저장하고 가뭄 때에 물을 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골프장은 비가 올 때에 물을 확 내려 보내고 비가 안 올 때에 물을 끌어다 쓴다. 우리나라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다면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타들어 갔지만 골프장들은 이런 때일수록 잔디를 살리기 위하여 물을 더 많이 쓴다. 제주도의 18홀 골프장은 가뭄 때에 하루 10,000 명분의 물을 쓴다. 이런 골프장을 2천 개 가까이 인가를 내줘서 수천만 명이 쓸 수 있는

물을 골프장이 쓰도록 인가를 내준 정부는 물 부족을 말할 자격이 없다.

하천의 재자연화

지금과 같이 인공적인 수로로 변질된 하천은 유지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재자연화해야 한다.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흐르면서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 침식이 되는 곳이 있고 퇴적이 되는 곳이 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얇은 여울이 생긴다. 이런 물길을 흐르는 가운데 에너지가 분산되어 홍수의 파괴력을 줄인다. 그리고 유속의 차이에 따라 돌과 모래와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생겨난다. 그에 따라 벌레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중 생물들이 제각기 먹이를 찾고 산란할 장소를 찾아 살면서 하천 특유의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하천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물의 흐름과 생물들의 왕래가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런 강이 건강한 생태계이다. 4대강 사업을 해서 강의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강을 파괴하여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독을 쌓아 육지와 단절시키고 댐을 쌓아 모든 곳을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채워 놓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이는 결국 재앙을 초래하여 많은 생물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하여 죽고 물은 썩고 홍수 범람을 일으킨다. EU는 물관리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하여 제4조에 "회원국은 WFD가 발효된 후 늦어도 15년까지는 모든 인공적이거나 심하게 변질된 수체를 부록V에 제시된 good surface water status(인간의 간섭이 약간만 허용된 상태를 말한다)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수체를 보호하고 강화하고 복원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인공적으로 변형된 하천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의 제404조에 하천의 인공화를 막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공사는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1,000개가 넘는 댐을 허물고 37,000여개의 강을 재자연화 하였다.

식수문제

당장에 가장 급한 물 문제 과제는 식수문제이다. 지금 4대강의 모든 강에 독성을 지닌 남조류가 주종인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데 이런 물은 상수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남조류들은 마이크로시스틴을 비롯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가축들이 이런 물을 마시고 죽었다는 기록이 많이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주로 간에 축적이 돼 독성을 나타내는 발암의

심물질이다. 이런 독성물질은 미량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피해를 줄 수 있다. 환경을 잘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상수원에서 남조류가 번성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며 이런 곳에서는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한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인구 50만의 톨레도(Toledo)시는 5대호 중의 하나인 이리(Erie)호에서 취수를 하는데 작년에 그 취수원 인근에 남조류 녹조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는 즉각 시민들에게 설사, 구토, 간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수돗물을 마시지 말고 끓이지도 말며 양치질도 하지 말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목욕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다.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들은 남조류가 번성하면 아예 상수원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한다. 이 녹조 문제는 나라의 안보문제로 취급하여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대강에 세운 댐과 신곡수중보, 잠실수중보의 수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 그렇게 신곡수중보에서 짙은 녹조가 신곡수중보 상류로는 전파되었지만 신곡수중보 하류에서는 씻은 듯이 없어진 사실이 그 효과를 잘 증명한다. 수문을 열면 댐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댐들은 장차 해체해야 하고 이어서 재자연화 해야 한다.

4. 물 운동의 방향

물은 원래 하늘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 없이 또 값없이 만민에게 내렸고 또한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이 물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베푼 은혜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큰 경제적인 부담없이 물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천생태계를 살려 국민들이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이를 당연히 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도리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물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수돗물을 민영화하여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효율을 올리도록 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봉이 김선달이가 하던 일로서 천륜에 어긋난다.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댐을 지어 수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도 허다한데 물로 인하여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태국에 수출했다고 홍보를 했는데, 실상은 댐과 인공수로를 만들어 수많은 지역민들의 생존의 터를 없애고 인권을 유린하는 공사가 되어 지역민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결국 무산되었다.

그리고 물은 하늘이 만민에게 같이 쓰라고 내린 것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서처럼 힘센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여 유역의 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물을 잘 관리하도록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 1992년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UNCED)이후에 UN은 정부 간 환경회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민간단체회의를 병행해서 열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민간단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는데, 힘을 모아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물 정책을 펴서 한 유역의 물을 유역민의 동의도 없이 다른 유역에 가져가는 일이 예사인데 이는 고쳐져야 한다. 물은 유역단위로 관리되어야 하고 수리권도 유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물 관리를 할 수가 있다.

5. 맺으며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인구가 두 배로 불었고 물 사용량은 세 배가 늘었다. 앞으로 21세기 중반까지는 세계 인구가 다시 두 배로 늘어나 100억에 이르고 물 요구량은 여섯 배가 늘어나리라고 전망된다. 물의 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 급격한 속도로 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큰 문제이다. 매년 23억 명의 인구가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들고 있으며 그 중 500만 명 이상이 이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거의 1억 명의 인구가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고, 특히 방글라데시에서는 인구의 1/3이 비소중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20세기가 세계 각국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전쟁을 치른 시기였다면 21세기는 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들 말한다. 물이 있는 나라는 살고 물이 없는 나라는 주저앉을 것이다. 한강, 낙동강을 비롯한 강줄기들은 우리나라 자연국보 1호이다. 이 강들을 함부로 손을 대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강들은 대통령의 소유도 아니고 혹세무민하는 정치가들이나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을 위해서 흐르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부자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과 또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자연의 순리에 맞게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보도자료

[성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준), 문장대온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

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편,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결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도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언론보도

-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힘 실리나 8/10 중도일보
-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전국 환경단체 우군으로 나서 8/11 동양일보
- 문장대 온천 개발 반대운동 전국 확산 8/11 노컷뉴스
-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운동 전국 확산 8/11 충청매일
- 한강유역네트워크 "문장대온천 개발 즉각 중단" 8/11 충청투데이
-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 "문장대 온천 개발 중단하라" 8/11 연합뉴스
- 한강유역네트워크 "문장대온천 개발 중단해야"... 반대운동 가세 8/11 뉴스1
- 한강네트워크, 문장대온천 반대...사업 중단 촉구 8/11 뉴시스
-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 "문장대 온천 개발 중단하라" 8/11 매일경제
- 문장대 온천 개발 반대운동 전국 확산 8/11 중앙일보
- "문장대 온천개발 땀 생태계 훼손 심각" 8/11 충청일보
- 한국환경회의 "문장대 온천 개발 반대" 8/12 세계일보
- "문장대 온천 개발 반환경적" 8/12 충청신문
-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운동 수도권으로 확산 8/13 한국일보

한강유역네트워크

문의: 02 735 7000, mengse7@gmail.com

간사단체: 서울환경연합(김동언 팀장, 이동이 활동가)